

의안번호	제 113 호
의결 연월일	2007년 4월 24일 (제 259 회)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제안자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07년 4월 20일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의안 번호	113
----------	-----

제안년월일 : 2007. 4. 20
제안자 : 댐관련대책특별
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150만 충청도민을 대표하여 달천댐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대청댐·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등을 당하고 있음
- 2001년 12월 정부에서 수립한 「댐 건설 장기계획(‘01~’11)」에 제외된 것을 재추진하는 것은 충청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달천댐 건설시 환경파괴와 21.8km²수몰(괴산읍, 감물·불정·장연면) 및 800여세대 이주민 발생으로 「괴산군」 존립기반 우려

- 달천댐 건설 반대 -

건의문



충청북도의회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개최한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백지화 되었던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달천댐 개발 가능입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99년 12월에 댐건설 계획이 없음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에도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달천댐건설 기본설계비 27억여원을 계상하였다가 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달천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댐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마다 우리 도민은 생업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 하면서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댐 건설 논란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은 주거의 불안감과 생산손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는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또다시 도민들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정부정책을 불신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천댐 건설 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 지류의 하단에 위치하여 맑은 물과 청정 환경지역으로 천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망개나무, 다슬기, 청둥오리,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만약 달천댐이 건설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21.8km²의 면적에 해당 하는 피산군의 1개읍(피산읍)과 3개면(불정, 장연, 감물)이 수몰되고, 800여세대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주변지역에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피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존립 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발전용댐인 피산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80년도에 완공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청원, 보은, 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00여세대 17천여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85년도에는 충주댐 완공으로 인하여 충주, 제천, 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0여세대 38천여명의 수몰이주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댐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당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안개일수와 습도상승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 생활피해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민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매우 실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달천댐도 건설되면 충분한 보상 없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과 댐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하는 이러한 댐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도민을 불신케 하고 힘들게 하는 달천댐 건설계획이 즉시 백지화되고, 도민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과 함께 달천댐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4. 24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